

전북자치도, 9월 금고 재지정 돌입

도민 체감형 금융 운용 가능하나

전북농협·전북은행
계약 연말 만료 따라
도, 지역사회 환원 등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
도내 중기·서민 지원
계획 항목 새로 배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부터 도 금고 재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전북농협(1금고)과 전북은행(2금고)이 맡고 있는 금고 계약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금고 재지정은 향후 4년간 수조원 규모의 도 예산과 각종 기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핵심 과정이다.

현재 1금고인 전북농협은 일반회계를 맡아 입출금 업무가 빈번하고 업무량이 많지만, 취급 예산 규모에 비해 잔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2금고인 전북은행은 특별회계를 담당해 일상 업무는 적지만, 관리 예산 규모가 1금고보다 훨씬 크다. 최근 신규 기금과 예산 항목이 2금고 중심으로 배정되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더 심화됐다.

도의회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역설적 구조'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업무 부담과 금융 혜택이 비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일부 도민들은 "금고가 도의 것인지 은행의 것인지 헷갈린다"며 낮은 금리로 공적 자금을 운용하면서 서민에게는 높은 금리로 대출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전북-몽골 우문고비주 교류·협력 확대 방안 논의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몽골 우문고비주 주지사 일행과 20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

전북자치도는 이번 재지정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5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환원, 향토은행 역할, 지역경제 기여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계획 항목을 새로 배정하고, 기존 평가 항목 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납부 편의 증진 방안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

정기예금 금리 평가 항목도 '만기 이후 적용금리'에서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 적용금리'로 변경됐다.

또한 협력사업비(지역 환원금) 규모를 높여 도내 복지, 교육, 문화, 청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고 재지정 심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월 말~11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위원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의원 등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 재지정은 단순한 금융기관 선정이 아니다. 도민의 세금과 지역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성공적인 재지정을 위해서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1·2금고 간 기금 배분 형평성 제고 △실질적인 지역 환원 효과 창출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의 도 금고 재지정 관련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며 "이번 재지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금고 운영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고 재지정에서 그동안 지적된 구조적 불균형과 지역 환원 부족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새로운 평가 기준이 도민 실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무궁화 열차와 작업자(7명)간 접촉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국가철도 안전관리체계 쇄신”

김윤덕 국토부장관, 경부선 열차사고 현장 방문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심히 유감… 원인규명 철저”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무궁화 열차와 작업자(7명)간 접촉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국토건설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 뒤 사고소식을 듣고 곧바로 사고현장을 방문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고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고속철도를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런 후진

국형 철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모든 작업계획 수립부터 그 사후관리까지 국가철도 안전관리체계를 전분야에서 쇄신하고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업자의 소중한 인명이 다시는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AI 신뢰성센터 2026년 본예산 반영 확정”

민주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현 통일부장관 겸임)은 20일, 전주시 덕진구에 들어설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허브센터' 구축사업이 2026년 기획재정부 본예산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반영으로 사업은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가며, 5년간 총 480억원(국비 300억·지방비 180억)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6개 지역이 신청했으나 전주시만 최종 선정됐으며,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관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첨단 벤처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AI 신뢰성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인



공 지능(TAI, Trustworthy AI) 구축을 목표로 AI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허브센터 역할을 한다.

센터가 들어서면 △AI 서비스·제품 기업 대상 신뢰성 향상 지원 △AI 활용 아이디어 기업 지원 △검증·인증 시설 구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테스트 환경 조성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1조원 규모의 '퍼지컬 AI 실증 국가전략사업'과 연계되며, 전주를 중심으로 AI 기반 검증·실증-상용화 전주기 체계가 구축된다.

전북 정치권 “농진청 수도권 이전 계획 중단하라”

전북 정치권이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먼저, 조지훈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20일 이와 같은 논평을 내렸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KBS 뉴스 보도를 보고 믿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23대 국정과제 중 51번으로 명시된 핵심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조지훈 대표



서난이 도의원

원칙을 여러 차례 공식화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난이 대변인은 도의원이 동명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획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농업 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 전면 철회 △정부 균형발전 기조에 맞는 지역 연계 기관 운영 △대통령 공약인 '농생명 산업 수도 전북' 실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다르게 수도권 일부 부서와의 업무상 효율화를 위한 부서 이동에 불과하며 이전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

혁신당 원진무지역위

조국혁신당 원진무지역위원장(전주)은 완주와 전주의 통합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준화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논의는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완주 군민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군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두려움과 불안을 감당하고 있다”며 “갈등을 방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미 주민 의사에 반하는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과 김포의 통합이 좌초된 것처럼,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발전 전략을 시민들이 지켜낸 사례가 있다”며 “전북도의 완주군 흔들리는 선을 넘었고,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는 이미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와 인구 소멸 대응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김왕중 혁신당 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조국혁신당 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인 김왕중 임실군의회원이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 내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임실군의 하늘이 초고압 송전선로로 거미줄처럼 뒤덮일 위기에 놓였다”며,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4kV·345kV 송전선로에서 발

생하는 소음과 전자기파가 가축 불임, 작물 유전자 변이, 생태계 교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전선로 반경 0.5km 이내 지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 임실군 설치 전면 반대 △사업계획 즉각 백지화 △안전의 철수 등 세 가지 요구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24년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선정대학

Since 2026
원광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통합

국내최초
다학년제
운영

원하는대로
원더랜드
원광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5. 09. 08.(월) ~ 09. 12.(금)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5. 09. 22.(월) ~ 09. 26.(금)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남원시의회 문화유산관광 발전연구회 중간보고회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문화유산관광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인식)는 지난 19일, 남원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문화유산관광의 정책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 과정에서 먹거리 코스(食로드), 금평지·용평지·수송지 등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코스, 혼불문화관 연계 프로그램 등 남원의 특색을 살린 관광코스 발굴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주중·주말을 구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요청도 제기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화유산관광 수요 창출과 확대를 위한 전략적 관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관광상품 개발·홍보마케팅·인내 인프라 확충의 세 가지 축에서 접근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